

NEWS LETTER

2026-04-30

Legal Issue

- AI로 사망자를 증인 재현한 사례에 대한 법적 고찰
- 타인이나의 상표로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다면 (키워드 광고 상표권침해사례)

MINWHO News

-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소송에서 전문적 역량 발휘로 주목
- 양진영 변호사,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AI시대 저널리즘 가치 보호를 위한 뉴스데이터제공 계약 가이드라인' 세미나 참여

Business CASE

 **법무법인민후**



Legal Issue

AI로 사망자를 증인 재현한 사례에 대한 법적 고찰

김경환 대표변호사

2021년 미국 애리조나주 챌들러시에서 발생한 로드 레이저 사건에서 크리스토퍼 펠키가 사망한 후, 2025년 딥페이크로 재현한 그의 인공지능(AI) 아바타가 법정에서 '증언'한 사례가 화제가 됐다. 이는 AI가 사망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현해 피해자 진술을 한 최초의 법적 사례로 기록됐다.

펠키의 가족은 형사사건 선고 공판에서 AI를 활용해 그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고, AI 아바타는 펠키의 생전 영상, 사진, 유튜브 동영상(PTSD 치료 후 연설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음성은 동영상에서 추출하고, 얼굴과 몸은 장례식 포스터를 참고했다. 노화 필터를 적용해 사망 4년 후의 모습을 추정했으며, 녹색 후드티와 회색 야구 모자 차림으로 재현됐다.

2025년 5월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AI 영상이 TV 화면에 상영됐다. AI 펠키는 가해자인 호르카시타스를 향해 “그날 우리가 마주친 건 유감이다. 다른 삶이었다면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며, “나는 용서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다. 가족에게는 “자, 이제 낚시하러 가야겠어요”라고 작별 인사를 했다. 판사 토드 랭은 “이 AI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진심으로 느껴졌다”고 호평했다. AI 영상 영향이 있어서인지 호르카시타스는 과실치사죄로 최대형인 10.5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AI 기술이 법정에 도입된 획기적인 예로 평가된다. 딥페이크 AI 기술이 사법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을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많은 법적·윤리적 논의도 촉발했다.

예컨대 AI를 이용한 극적인 감정적 연출이 판사나 배심원의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만약 이 기술이 선고 단계가 아닌 '사실 관계를 다루는 증거'로 사용된다면, 피고인 측에서 AI를 상대로 반대 심문을 할 수 없다는 증거의 신뢰성 또는 절차적 문제점도 있다.

개인정보 관점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바, AI가 말한 '용서'의 메시지가 실제 고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유족이 입력한 데이터에 의한 '편집된 인격'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은 관계로 늘어가는 사망자의 재현 사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펠키와 같이 법정에서 사망자를 재현하는 비영리적 목적도 있지만 유명인이나 위인, 철학자, 정치인, 종교인 등을 상업적·영리적으로 재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AI 기술은 사망자를 대면할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를 극복해줬다.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기술적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망자의 유족들이 있을 수 있으며 오남용을 통한 사망자의 인격적 가치의 왜곡이나 훼손도 우려되고 있다.

사망자의 디지털 인격권 및 사망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확한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생전의 데이터가 사후에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편집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족의 동의권뿐만 아니라 고인의 생전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영리적 추모 목적과 영리적 착취를 구분하고, 원하지 않은 '편집된 인격'의 생성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AI는 죽음이라는 물리적 단절을 보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고인의 진실된 삶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타인이 나의 상표로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다면 (키워드 광고 상표권침해사례)

오슬기 변호사

A는 화장품 브랜드 'H'를 런칭하며 상표 등록까지 마쳤다. 브랜드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 확보를 끝낸 셈이다. 이후 'H' 브랜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높은 인지도를 얻었고, 매출 역시 가파르게 성장했다. 그런데 어느 날, 포털사이트에서 "H"를 검색하자 전혀 다른 브랜드인 제품 광고가 상단에 노출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최근 온라인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처럼 타인의 상표를 '검색 키워드'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키워드 검색광고도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은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공고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 검색광고가 이러한 '상표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이미 이 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 등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 나 문구(키워드)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그 단어 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그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여(대법원 2010후3073 판결), 키워드 검색광고 역시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광고의 형태를 전통적인 신문·잡지·간판 등에 한정하지 않고, 검색결과 화면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역시 '광고'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즉, 온라인 검색 광고도 상표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이후 하급심 판결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파워링크' 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프리미엄링크'를 통해 광고함에 있어 수요자의 오인·혼동이 초래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라20105 결정).

결과 화면이나 연결되는 판매 사이트에 표시되지 않아도 침해

최근 특허법원 판결은 이러한 흐름을 한층 더 분명히 했다. 특허법원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검색어로 지정하여 이 사건 키워드 검색광고를 한 것은, 그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자신의 제품 또는 그 판매 사이트 링크에 해당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키워드를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행위를 인정하였다(특허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나10768 판결).

특히 최근 특허법원 판결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검색결과 화면이나 판매 링크에 해당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그 키워드를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자사 상품으로 연결했다면 이미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이지 않게 썼으니 소비자가 혼동할 리 없다"는 항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단이다.

상표권자 A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단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또한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상표법 제230조). 다만 모든 사안에서 곧바로 형사 절차를 택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침해의 정도, 광고의 범위, 당사자 간 사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장 발송, 광고 중단 요청,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형사 절차 등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권 보호는 '사후 대응'까지 포함한다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권리 보호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특히 온라인 광고 환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상표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브랜드의 신뢰와 시장 질서는 빠르게 훼손될 수 있다. 상표권자는 변화하는 법리와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침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다.



오슬기 변호사

[프로필 보기](#)

02-532-3426
ohsk@minwho.kr

MINWHO NEWS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소송에서 전문적 역량 발휘로 주목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소송에서 전문적 역량 발휘로 주목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대응 역량을 발휘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 고객 행태정보 유출 사건 2건과 관련된 취소소송 항소심을 수행하며, 데이터·개인정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대응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서 중소형 로펌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예산 제약과 이해충돌 문제로 대형 로펌 선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 강점을 가진 로펌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민후를 비롯한 중소형 로펌들이 주요 분쟁을 담당하며, 대형 로펌과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서 정부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면서, 사건 대응에 있어 전문성과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 및 IT-데이터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기술적 요소와 법적 쟁점이 결합된 사건에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법리 분석뿐만 아니라 보안 체계, 데이터 처리 구조, 사고 대응 절차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데이터 및 IT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쟁에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MINWHO NEWS

양진영 변호사,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AI 시대 저널리즘 가치 보호를 위한 뉴스데이터 제공 계약 가이드라인' 세미나 참여

양진영 변호사,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AI 시대 저널리즘 가치 보호를 위한 뉴스데이터 제공 계약 가이드라인' 세미나 참여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가 주최한 'AI 시대 저널리즘 가치 보호를 위한 뉴스데이터 제공 계약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AI 확산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분쟁과 데이터 이용 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참여를 통해 관련 분야에서 축적된 법률적 경험과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 핵심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언론사와 AI 기업 간 공정한 뉴스 이용 체계 구축과 저널리즘 가치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뉴스 콘텐츠 활용 방안과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등이 공유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외 저작권 분쟁 사례와 정책·제도 개선 방향까지 폭넓게 다루지며, 데이터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AI 시대 뉴스 저작권 분쟁의 현재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최근 증가하는 AI 기업과 언론사 간 분쟁 흐름을 분석하고 주요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뉴스 콘텐츠가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여부, 공정이용 판단 기준, 데이터 활용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환경에서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법조계, 정책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번 세미나가 향후 뉴스 데이터 이용 기준과 저작권 정책 정비 논의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Business CASE

이달의 주요 업무사례

1. 분양대행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정보 위법 처리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2. SW 프로그램 불법 사용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원만한 합의 도출
3. 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유출 방조 의혹으로 제기된 형사사건 피의자 대리, 수사단계 조력해 불송치 결정 도출
4.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채무자 대리, 원고청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승소 (원고측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과도한 전직금지 약정 주장에 대응)
5.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범위 해석이 쟁점이 된 산업기술유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상고기각 최종 승소
6. 금융·대부업 기업에 비대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설명·고지의무 이행의 법적 효력 관련 자문 제공
7. 원사업자 배제 수주에 대한 선제적 법률자문 (하도급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정사용에 대해 부정경쟁 행위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 내용증명 업무 등)
8. 대형 유통·플랫폼 계열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고지 통지 시기·주기 관련 법률자문
9. 지역 디지털 정보 공유 포털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운영 서식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10. 해외 수출 기업의 상표권 해외 효력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상표 전 관련 법률자문

Mi 법무법인 민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주요 업무 사례 바로가기]



[전화 상담 바로가기]



[카톡 상담 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상담 바로가기]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